



※ 정부가 생산·공급하는 재화와 서비스 중에는 **사용재적 성격**을 갖는 것들도 있음
 → 무료로 배분하기 보다는 일정한 가격을 받고 배분해 주는 쪽이 효율성이나 공평성의 측면에서 모두 더 바람직함

1. 공공요금 부과 목적

※ 공공요금 부과 당위성 : ① 효율성(주목적), ② 공평성(주목적 아님), ③ 재정수입의 획득

1. 효율성

- 공공부문은 시장의 가격기구가 작동하기 어려움
 → 공공요금의 형태로 가격부과가 가능하다면 MB, MC에 대한 필요한 정보획득 가능
- 생산과정에서의 효율성과 소비과정에서의 효율성 달성
 → 수도와 전기가 완전히 무료 공급되면, 아껴 쓸 유인 없음(낭비)
 → 적절한 수준에서 소비를 유도하는 효과

2. 공평성

- 공공요금을 부과하는 **주목적이 소득 재분배는 아님**
- 전기와 수도 같이 **사용재 성격을 지닌** 재화와 서비스
 - ① 소비하는 사람들이 생산의 소요비용의 일차적 책임을 져야 함
 - ② 공공요금을 부과해 각자가 소비하는 양에 비례해 그 비용의 부담을 지도록 하는 것이 공평함
 ➔ 국방이나 경찰서비스는 비경합성으로 인해 더 많이 소비하는 사람이 더 많은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원칙 적용은 의미 없음

3. 재정수입의 획득

- 공공요금 부과를 통한 재정자금의 획득은 부차적인 목표 (아주 제한된 경우에서**만** 추구 허용)
- 공공부문은 민간 부문 같은 적극적인 이윤동기가 없음(⇨ 방만 경영과 비효율성을 막기 위해 적절한 채산성 추구 요구)

2. 적정 공공요금의 이론

1. 한계비용 가격설정(marginal cost pricing)

- $P = MC$

- 전제조건

- ① 생산과 소비 과정에서 외부성이 존재하지 않아야
- ② 현재의 소득 분배 상태에 아무 문제가 없어야
- ③ 다른 부문에서 가격과 한계비용이 괴리되지 않아야(→ 다른 부문에서 조세부과 등으로 괴리 존재시, 일부러 한계비용과 가격을 다르게 만들 필요 존재)

- 시설용량(capacity) 제한 서비스 : 도로, 문화예술 공간

→ 앞의 전제조건이 충족되는 경우라고 할지라도 가격을 한계비용과 일치시키기 힘든 상황

2. 기존시설의 효율적 이용

(⇨ 단기적인 시각에서 이미 주어진 시설을 가장 효율적 활용 문제)

- 수영장의 시설용량 제한

→ 하루당 사용자 수가 \hat{N} 에 이르면 한계비용곡선이 갑자기 수직으로 상승하는 형태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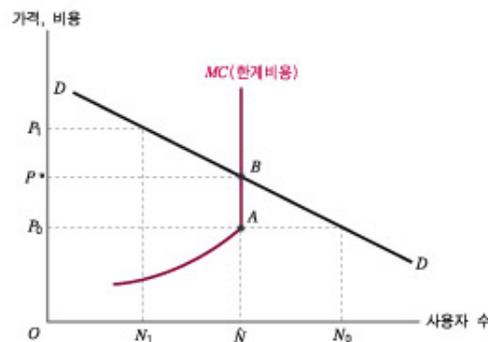
→ \hat{N} 이상으로 한계비용을 정의 불가

- P^* 가 가장 효율적인 수준이지만 A점 위쪽으로 수직선 모양을 갖는 구간에서는 한계비용을 설정할 수 없어 한계비용가격설정방식이라고 할 수 없음

- 경제적 지대(economic rent)¹⁾ 존재 : 가격이 한계비용을 초과하는 부분(선분 BA)

- 한계비용에 경제적 지대를 더해 가격을 설정하는 방식으로 조정 필요

기존시설의 효율적 이용 **그림 23-1**



1) 미시경제학에서는 경제적 지대를 어떤 생산요소에 지급된 보수 중 기회비용인 전용수입(transfer earnings)를 제한 나머지를 의미라고 정의되는데 여기서 적용된 개념과는 약간 차이가 있다.

3. 최적시설규모의 선택

(⇒ 장기적 시각에서 시설규모 자체가 선택의 대상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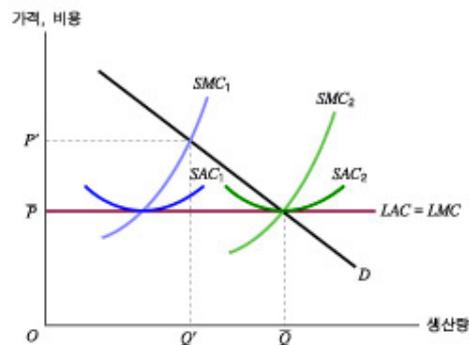
(1) 가정

- ① 시설규모의 선택이 자유로움
- ② 생산기술은 규모수익불변(CRS) → $LAC=LMC$ = 수평

(2) 분석

- ① S_1 이란 시설규모가 주어진 상황에서 $D = SMC_1$ 의 (P', Q') 는 효율적인 자원배분 수준이 아님
- ② 장기적 관점에서 시설규모의 선택이 자유롭다는 측면에서 $P > LMC$ → 비효율적 자원배분
- ③ 장기적 관점에서는 $D = LMC$ 에서 가장 효율적 → S_2 가 최적 시설규모, (\bar{P}, \bar{Q}) 가 최적

최적 시설규모의 선택 그림 23-2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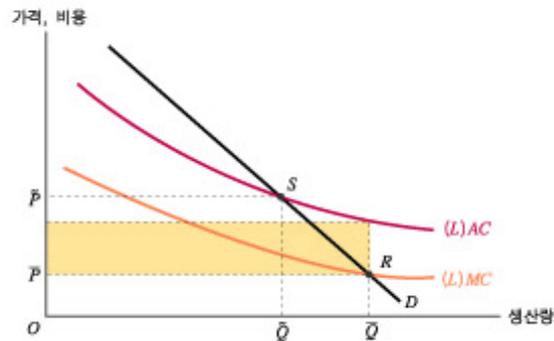
(3) 최적 시설 규모의 선택 문제

- 〈STEP1〉 최적 시설규모 선택
 〈STEP2〉 한계비용 가격설정 원칙 적용

3. 한계비용 가격설정 방식의 문제점

1. 규모수익체증과 한계비용 가격설정

- 규모의 경제(규모수익체증) 경우 특징
 - ① (장기)평균비용곡선은 우하향하는 형태
 - ② MC는 모든 수준에서 AC보다 아래에 위치
 - ③ 자연독점 (수도, 우편서비스)
- 한계비용가격설정 방식의 경우 결손 발생(노랑색 면적)

규모수익체증하의 한계비용 가격설정 **그림 23-3**

2. 여러 가지 대처방안

(1) 일반자원(조세)에 의한 중당

■ 문제점

- ① 손쉽게 결손을 메울 수 있게 되면 사업을 담당하는 사람들이 최대한 열의 부족
- ② 결손 규모가 클수록 다른 부문에서 수행하는 사업과 가용자금을 놓고 다툼 발생
- ③ 사회후생손실 발생 (조세 징수과정에서 초과부담 유발)

(2) 평균비용 가격설정 방식의 채택

■ S점((\bar{Q}, \bar{P}))에서 균형점

■ 문제점

- ① 효율적인 생산수준보다 작아 후생손실 발생
- ② 손실이 0이 되기 때문에 구태여 비용절감 노력을 할 유인이 없음

(3) 가격차별의 이용

■ 제2급 가격차별

■ 적은 사용량의 구간에서는 비교적 높은 효율로 시작해 가장 많은 사용량의 구간에서는 MC 수준으로 낮춤

■ 장점

- ① 많은 양의 수돗물을 사용하는 사람은 효율이 MC로 낮아져, 한계비용가격설정 방식 적용 효과
- ② 효율이 높은 구간을 통과하면서 MC 이상의 요금 부과로 결손 방지
- ③ 많은 양을 사용하는 사람에게는 사용량에 대한 결정을 교란하지 않는 장점

■ 단점

- ① 적은 양의 사용자에게는 MC보다 높은 효율의 구간에서 사용량 결정으로 교란 발생
- ② 가난한 사람들이 적은 사용자라면 분배적 측면 문제

(4) 이부가격제도(two-part tariff)의 채택

■ 가입비(entry fee) + 사용료(usage fee)

→ 소비자로 하여금 일정한 금액을 지불하고 특정 상품을 사용할 권리를 사게 한 다음, 그것을 사는 양에 비례해 추가적인 가격을 지불하게 하는 방법 구사

■ 독점적 생산자는 소비자잉여의 크기를 미리 예상해 가입비로 받고, 사용료는 한계비용과 일치하여 이윤극대화 추구

→ 소비자 잉여는 독점자가 가져가나, 선택된 생산수준은 효율적(한계비용에 일치시키는 가격책정에서 자원배분의 효율성을 달성하고,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결손은 가입비 징수로 충당)

■ 소비 배제효과: 가입비가 너무 비싸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예 소비 포기 가능성

4. 램지가격

1. 공공부분 목표

: 일정한 재정수입을 달성 + 효율성의 상실 극소화

2. 램지가격설정방식(Ramsey pricing rule)

(1) 가정

① 공공부분에서 두 서비스는 일정한 재정수입을 달성해야 함

② 두 재화간의 수요의 교차탄력성 0 (= 독립적 관계)

$$\frac{\frac{(P_X - MC_X)}{P_X}}{\frac{(P_Y - MC_Y)}{P_Y}} = \frac{\varepsilon_Y}{\varepsilon_X}$$

(2) 내용

① 가격과 한계비용 사이의 격차 비율이 수요의 가격탄력성 비율과 같도록 가격 설정

② 램지의 역탄력성 법칙(inverse elasticity rule)과 동일 맥락

③ 한계비용가격설정 원칙 포기 (:: 재정수입 요구)

④ 차선으로 효율성의 상실 극소화 추구

⇒ 수요의 가격탄력성이 큰 서비스일수록 P 를 MC 에 가깝게 설정

(※ 최적 조세이론에서 수요의 가격탄력성이 작은 상품일수록 더 높은 물품세율 적용과 같은 맥락)

(3) 한계

① 효율성 측면만 고려해 분배적인 측면 문제

② 가격탄력성이 작은 경우는 필수품의 경우로 더 높은 가격을 부과

(4) 참고

규모의 경제가 적용되는 경우 결손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으로 작용가능

⇒ 정부부분이 여러 가지 재화나 서비스를 모두 한 묶음으로 보고 최적 상대가격구조에 대한 처방을 내

린다는 측면에서 적용가능 (한 가지 공공서비스만 고려시는 적용불가)

5. 공공요금 결정의 현실적 고려사항

(1) 공공부문도 수요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할 경우가 많음

→ 평균비용, 한계비용 추정 어려움

(2) 공공요금 결정 단계에서 여러 목표 중 어떤 목표에 상대적 비용을 높게 두는가의 문제

→ (효율성과 공평성) 공공요금의 부과목적이 소득재분배에 있는 것은 아니나, 가능한 빈곤층의 부담을 가볍게 해준다는 원칙하에서 공공요금을 부과해야 함

(3) 최소한의 재정수입 달성

→ 투하된 자본에 대한 정상적인 수익마저 회수해야 함

(4) 행정적인 측면에서 단순성 요구

(5) 경제의 다른 부문과의 관련성과 경제여건 변화에 대한 신속성 고려

※ <착오 주의>

우리사회에서는 공공요금이 낮을수록 더 좋다는 잘못된 인식이 자리잡고 있는데, 현재 우리나라 공공요금 수준은 싼 편에 속하나, 공공요금을 약간이라도 올리려는 기색을 보이면 언론매체들이 서민 생계에 부담이 된다고 무작정 떠들어 대는 것을 볼 수 있음

높은 공공요금이 서민 생계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역할을 하는 것은 사실이지만, 공공요금을 소득재분배의 주요 수단으로 삼아서는 안된다.